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사실 취재·확인 없는 단정적 보도” 한 조선일보 등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보도심의 제재 결정 통보받아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취재·확인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 신빙성 없는 일방적 주장 인용 게재한 문화일보, 의심되는 주장 과장된 제목·사진으로 보도한 펜앤마이크 등 3개 언론사 ‘주의’ 조치
- 황운하 현안대응 TF 부단장,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앤마이크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 신청한 결과, 세 언론사 모두 제재 결정이 확정되었다. ‘아니면 말고’ 식 보도를 한 일부 언론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 보도(21.10.3.)는 “성남시장실에 방문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직폭력배” 라는 장기표의 일방적 주장을 실으며 조직폭력배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전달했는데, 선거보도심의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확인없이 단정적으로 보도**” 하였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문화일보(21.10.21)는 “이재명 ‘조폭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 는 사실을 게재하고 박철민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으며, 이재명 후보에게 “그 전말을 밝히라” 며 조폭연루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보도심의위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다**” 며 이 역시 제재 조치했다.

또한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른바 ‘박철민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된 증거라며 일방적 주장을 한 국민의힘 김용관 의원의 발언을 무분별하게 전달한 펜앤마이크(21.10.18.)의 보도에 대해서도, “**제보자 주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제목과 사진 등을 보도**” 한 것으로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에 대해 공통적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현안대응 TF 황운하 부단장은 “허위사실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덧씌웠던 일부 언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왜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